

# 市, 군공항 이전 부지 개발...道, 무안공항 활성화 최우선

## 광주시·전남도 대선 공약 건의안 될 답았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 등과 협의를 거쳐 1월말까지 대선 공약 건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현재까지 발굴한 주요 사업과 제로는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문화·체육, 복지·여성, 자치·인권 분야 등 7개 분야 47개 사업이다.

전남도는 현재 산업·경제, 관광·문화, 농수산, 정주환경, 기반시설 등 5개 분야 55개 사업을 대선 공약 과제로 발굴했다. 이 가운데 13건이 유력한 대선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42건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중이다.

◇광주시=광주시의 분야별 대형 대선 공약 사업은 ▲산업 경제 분야 11건 ▲환경 안전 분야 5건 ▲도시 교통 분야 7건 ▲문화 체육 분야 8건 ▲복지 여성 분야 6건 ▲자치 인권 분야 5건 ▲영 싱크-뱅크 전담팀 5건 등으로 사업비 규모는 23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광주의 미래 먹거리 신사업 개발 사업으로는 자율능형 에너지 자립 타운 시범 조성 등의 자율능형 스마트 E-시티 조성(7000억원)과 차세대 기초과학 연구클러스터 조성(1조300억원), 전장 부품산업 메카조성(3000억원), 수소자동차 허브도시 조성(1조2299억원) 등 11건(5조8997억원)이 제시됐다. 도시교통 분야에는 광주시의 현안사업인 군 공항 이전사업(5조7000억원)과 서창동과 마북동 단야고 인근에 건설할 광주 신성장 산업벨리 조성사업(1조원), 광주역 복합기점공간 조성(1000억원), 광주~대구 내륙 철도 건설(4조8987억원), 광주 순환고속도로 5구간 건설(4841억원) 등이 포함됐다.

무등산국립공원·광주호 영산강 황룡강 등 자연자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비엔날레 활성화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은 13건(1조7559억원)이다. 또 지역의

스마트 시티·수소허브 도시  
市, 47개 사업 사업비 23조

여수~남해 해저터널건설 등  
道, 10대 핵심 4대 정책과제

매력적 콘텐츠 발굴과 연계한 사업 7건(14조5532억원)도 포함됐다.

◇전남도=전남도는 앞으로 5년(2017~2021년)이 전남 미래를 좌우할 중요 시기로 판단하고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전남도가 발굴한 주요 공약 과제에는 대선 공약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전남도의 '미래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0대 핵심공약과 농어촌·미래산업·관광문화·기반시설(SOC) 등 분야별 4대 정책과제로 구분해 제시하기로 했다.

SOC 분야에서는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이 단연 우선순위다. 항공 정비비수리 산업단지 조성(1020억원)과 동남아 및 중국 등 추가 국제선 유치, 호남고속철도 경유, 공항기반시설 확충(사업비 480억원) 등이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또한, ▲서울(목포)~제주 고속철도 건설(16조8000억원)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건설(5040억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고성능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튜닝부품 실증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고성능 슈퍼카 산업기지 조성'(4730억원)이 1순위다. 해경 제2정비창 유지를 통한 수리조선 특화산업 단지 조성, 에너지산업 융합 생태계 구축(2조1080억원) 등도 대선 공약으로 검토중이다.

국립 백산연구원 설립을 통한 생물약 집적단지 조성(7100억원) 등도 있다. 농림수산 분야는 수산식품 가공·수출



3일 오후 서울 중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첫 변론은 당시자인 박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 9분 만에 종료됐다. /연합뉴스

산단, 수산기자재, 수산식품 연구기관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산식품 수출전문 단지 조성'과 첨단원예단지, 첨단원예 기술지원센터, 유기농 복합타운 등으로 구성되는 '첨단 생명농업 단지 조성'(10000억원) 등이 앞 순위에 있다.

이밖에 ▲첨진강 살리기 프로젝트 ▲국가방사선 안전과학원 설립 ▲UN 조달물류기초관망 유치 등 3건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첨단스마트 농업도시 조성, 중소형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립노인 기술훈련원 설립, 해상교통 대중화 등이 55개 과제에 포함돼 검증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최현석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례 내세웠지만...공개신문 부담에 실익없다 판단 장외 여론전 집중...소추위·野 “탄핵법정서 말하라”

### 박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애초 박 대통령의 불출석은 변호인단이 예고했지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이종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혀 앞으로도 당분간 박 대통령이 직접 현지에 나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할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랐다는 것이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참고로 노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게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출석하면 소추위원 측에서 정치공세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 역시 ‘최소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의혹을 공개

재판정에서 추궁당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전례를 내세워 불출석을 결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형사 재판 절차를 준용하는 공개변론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대통령이 마치 피고인처럼 집중신문을 받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관측도 있다. 특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박 대통령의 공개 진술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관들의 심문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에게 자칫 유죄나 탄핵을 인정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장외 변론’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참고로 노 전 대통령도 탄핵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게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 역시 ‘최소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의혹을 공개

소추위원단 및 야권의 비판과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권성동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탄핵법정서 말하라. 또 박 대통령 간담회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압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첫 변론이 9분 만에 끝난 데 대해 “임기 내내 법치주의를 소신이라 밝힌 대통령의 처절한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장 장영영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출몰기자단을 모아놓고 일방적인 거짓말을 늘어놓더니 정작 헌법재판소는 출석도 하지 않았다”면서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 ‘청개구리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여론 일각에선 다음달 말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박 대통령이 직접 최종 변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 “박 대통령이 끝까지 안 나가시는 게 옳으리라고 본다.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한 번은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국회 개헌특위 여야 36명 인선 완료 위원장 새누리 이주영 의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3일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또 4일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해 국회 차원의 개헌에 탄력이 불거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내정된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주영 의원 외에 이철우(간사)·김정훈·김광림·박순자·이채익·윤재욱·정용기·강효상·성일종·정종섭·김성태(비례) 의원 등 12명의 위원을 확정했다고 김선동 원내 수석부대표가 발표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도 홍일표(간사)·김재경·권성동·유이동 의원 등 위원 4명을 확정해 명단을 공식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인영 의원을 간사로 박병서·원혜영·이종걸·강창일·변재일·이상민·백재현·이춘석·김경협·이인주·김종민·정춘숙·최인호 의원 등 14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국민의당도 일찌감치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간사)과 천정배·송기석·이상돈·이태규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부(전문제인)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개헌론자로서, 탄핵과 대선 정국에서 개헌론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었는지 주목된다. 개헌과 관련, 첫 쟁점은 개헌을 통해 대

선 전에 완료하느냐,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는가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 개헌을 시도할 경우 시간상 권력구조만 바꾸는 ‘일포인트’ 개헌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선 후로 미룬다면 전면 개헌에 포인트가 맞춰지게 된다. 이 경우 국가 정체성, 통일, 복지, 노동, 사법제도, 경제적 평등과 주거 문제 등 문제 등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어 순탄한 논쟁과 나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2016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소비자중심경영(CCM) 한국소비자지원원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

황금연휴 46주년 TTTG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16년 연속수상! 명예의 전당 입성

신상! 나고야+오사카를 한번에 1석 2조 상품!

신상품 출시! 알찬 실속 나고야+오사카 4일 1,099,000원 [43천원] [선박관광 포함] [오사카권]

- 나고야 도코나메 마을+사승공원, 신사바시 관광
- 교토(행수사유노모미야진저도계초교) 관광

황금연휴 1/27 단회 무안출발!

중부지방의 특별한 매력 **나고야!**

롯데관광 나고야 상품 공통특전! (일부 상품에 한함)

- 1 국적이 대한항공 이용
- 2 왕복 차량 수송 포함(광주-유스퀘어 터미널, 전주-월드컵 경기장)
- 3 아침도시락 제공 · 하루 한끼 특식(풍격상품)
- 4 일본 최대규모 일루미네이션(빛축제) 관람
- 5 유네스코 문화유산 시라카와와 합정촌 관광
- 6 일본의 3대 성중에 하나인 나고야성 관광

여행경비 입금은 고객별 전용계좌로 가능합니다.

선착순 마감임박! 동반자 30만원 할인! 대한항공 비즈니스 좌석 제공!

설원의 대파노라마 오쿠히다 로프웨이

품격 ALL 포함 오쿠히다 로프웨이+일루미네이션 4일 [성인/소아] 1,649,000원 [유아] 100,000원 [선박관광 포함]

- 오쿠히다(나고야) 1일 1특식(카이세키, 스카카정식, 장어덮밥) 제공
- [특급] 오쿠히다 료칸, 나고야 힐트호텔 숙박

정통/입금호텔 오쿠히다 로프웨이+일루미네이션 4일 1,449,000원 [43천원] [선박관광 포함] [나고야+오쿠히다]

- [일급] 나고야 국제 호텔, 오쿠히다 료칸 숙박

일본 3대 게로운천 특급료칸

품격 ALL 포함 특급료칸 수명관+일루미네이션 4일 [성인/소아] 1,649,000원 [유아] 100,000원 [선박관광 포함]

- 케로(기후) 1일 1특식(카이세키, 스카카정식, 장어덮밥), 온천욕 2회
- [특급] 수명관 료칸, 기후 그랜드호텔, 게로운천 관광 및 숙박

정통/입금호텔 일본 3대 게로운천+일루미네이션 4일 1,449,000원 [43천원] [선박관광 포함] [케로(기후)]

- [일급] 게로 깃센호텔, 나고야 국제호텔 숙박, 게로운천 관광 및 숙박